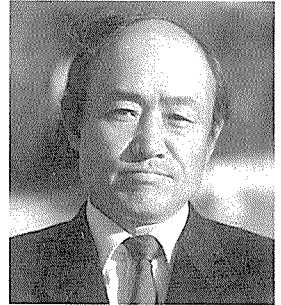


“방사성폐기물 처분-우리는 과연 적절히 대응하고 있는가?”



강 창 순
서울대학교 교수

원자력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방사성폐기물은 발생하게 마련이다. 이들 폐기물은 처분하지 않으면 계속 쌓이게 된다. 따라서 원자력을 지속적으로 이용하고자 한다면, 발생하는 폐기물을 적절히 처분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과제가 필연적으로 뒤따르게 된다.

그런데 방사성폐기물 처분 문제가 국내에서도 굴엽도 사건 및 안면도 사태를 통하여 물의를 일으키더니, 최근에는 대만전력이 란위도에 저장해 오던 저준위방사성폐기물 중 일부를 북한에 이송처분토록 한 결정으로 우리나라 전체가 들끓고 있다. 정부, 환경단체를 비롯하여 각 관련 기관은 이 사안에 대하여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으며, 이를 적극적으로 저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대만의 방사성폐기물 복송에 관한 우리의 최종적 관심과 우려는 안전성 확보에 있다고 하겠다. 현재 북한의 폐기물 처분장 부지로 대두되고 있는 황해도 평산지역은 휴전선에서 불과 100킬로미터 북방에 위치하고 있어서, 남한의 국민생활이나 환경에 직접적으로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접지역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염원인 통일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 처분장의 안전성 문제는 남북한이 공동으로 대처해야 하는 우리 자신의 과제가 되기도 한다. 더구나 란위도에서부터 평산까지의 폐기물 해상수송은 우리의 서해연안을 통과하지 않고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로서는 당연히 처분과 수송에 관련된 안전성 확보, 측면에 매우 큰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지구환경보전의 차원에서 볼 때 방사성폐기물은 지구내 어떤 장소에 처분되더라도 철저한 환경영향평가와 안전성분석을 거쳐 반드시 그 안전성이 확인된 후 추진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처분은 해당 국가나 지역의 지역적인 과제가 아니라 전세계가 관심을 갖는 과제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안전성 확인절차는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법규와 제도를 비롯하여 잘 짜여진 관행을 따름으로써 가능하다.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원자력의 안전성확보를 위한 북한의 능력 및 의지, 그리고 노력의 결핍이라 하겠다. 안전성 확보를 위한 북한의 법규, 제도 및 관행이 매우 미흡하다는 것은 국제사회에 잘 알

려진 사실이다.

우리 원자력계는 그동안 대만의 원자력계와 지속적으로 긴밀한 협력체제를 유지하여 왔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대만의 원자력 정책이 철저한 안전성을 추구하면서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금번 대만전력과 북한 사이에 논의되고 있는 방사성폐기물 복송문제는 언뜻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러한 결정을 내리게 된 대만전력의 배경과 의도를 우선 정확하게 파악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대만정부가 합법적 안전규제 절차를 거쳐 안전성을 확인하였는지 그 여부를 확실히 하여야 할 것이다. 감성적이고 즉흥적인 대응보다는,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냉철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번 기회에 우리는 방사성폐기물 처분과 관련하여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첫째, 방사성폐기물은 발생국가의 책임하에 처리·운송·처분되어야 하고, 처분후에도 장기간에 걸쳐 그 안전성이 관리되어야 한다. 물론 이러한 제반 행위나 행위중 일부가 다른 국가나 기관에 의해 위탁 수행된다 할지라도, 결국 방사성폐기물 발생국가가 그 책임을 져야 한다. 둘째, 우리는 가능한 한 방사성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을 피해야 한다. 왜냐하면 자국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자국에서 관리할 때 가장 안전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셋째, 만약 처분을 위한 방사성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이 부득이한 경우, 관련 인접국가의 사전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처분장의 안전성 및 환경영향, 그리고 폐기물 운송과 관련된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충분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자신을 한번쯤 뒤돌아 보아야 한다. 우리는 과연 방사성폐기물 처분과 관련하여 용의주도하게 대응하여 왔

는가? 지금까지의 방사성폐기물 처분 정책은 어떠하였는가? 정부부처간의 책임과 권한은 확실한가? 무엇이 문제인가? 방사성폐기물 처분과 관련하여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우리 정부가 정책을 불필요하게 자주 바꿈으로써 국민의 신뢰성을 실추시키고 있다는 사실이다. 안면도 사태 후 정부의 대응, 전문가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굴업도를 처분장부지로 지정·고시하고 추진하다가 활성단층의 징후를 발견하였다고 하면서 맥없이 물러난 웃지 못할 사건, 그리고 처분장부지 선정과정에서 여러가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자 방사성폐기물 사업 자체를 사업자에게 되돌려주고 정부가 부담해야 할 책임을 회피한 사건, 곧 이어 힘들게 입법화했던 방사성폐기물 기금을 폐지한 웃지 못할 결정, 이러한 일련의 무책임한 정부의 정책변경은 우리 국민을 당혹하게 하고 있다. 방사성폐기물 처분의 최종적 책임은 정부에 있다. 이를 국가차원에서 책임지는 이유는 방사성폐기물은 오랜 기간에 걸쳐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방사성폐기물 기금은 현세대가 발생시킨 방사성폐기물의 관리비용을 후대에 전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적립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언젠가는 방사성폐기물 기금이 또다시 제적됨되어야 할 것이며, 최종적 관리책임도 국가로 되돌아와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방사성폐기물 처분 정책과 관련된 무수한 연구가 추진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으로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제라도 합리적인 정책을 조속히 수립하고 이를 일관성있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 그것만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나아가 원자력의 이용을 살리는 길인 것이다.